



3면
민주 전북자치도당 선대위 출범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음 2월 12일) 제34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정

경기·인천에 361명 증원
나머지 1639명 지방 배분
전북권은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정원 추가
총 115명 증원된 350명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총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된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권역별 비중은 서울 16%, 경인 11%, 지방 72%가 된다.

지난 4일까지 서울권 의대 8개교에서 총 365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나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이다. 경인권은 565명, 지방권은 2,471명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배분에 따라 전국 의대의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에 써주세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은행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기탁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백종일 전북은행 은행장, 김동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엔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방 거점국립대는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북권 의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전북대의 경우 당초 98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신청인원보다 40여명이 적은 수치다. 이번 정원 배정으로 전북대의 경우 200명의 의대정원을 확보했다.

원광대는 93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33명이 모자란 57명이 배정됐다. 현재 정원은 93명으로 앞으로 매년 원광대

는 150명의 의대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권 의대 정원은 350명으로 증원됐다.

이처럼 거점국립대 위주의 배분이 이뤄진 배경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에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배정위원회를 지난 15일 가동해 닷새 만에 이 같은 배분 결과를 내놨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중 비수도권 의대에 82%(1,639명)를 배정해 지방의 심각한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수도

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필수 및 지역의료 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료원, 보건소 진료시간 확대, 공중보건조사 투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비상의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도내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전주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사 임금 협상 결렬 따라
출퇴근 시간대 마을버스 등 긴급 투입 이용객 불편 해소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실시간 상황 파악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이하 노조)는 전일여객·시민여객(이하 사측)과의 2024년 임금 협상 결렬됨에 따라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전주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인 만큼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출·퇴근시간대 예비차량 투입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노조 파업에는 전주시내버스 5개사 운전원 전체 1,046명(2월 말 기준) 중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2개사의 노조원 198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2개사의 노조원 198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9대의 버스 중 72대(18%)가 멈춰 서게 되면서 31개 노선이 운행 중단 및 배차시간 증가 등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영향을 받는 노선은 평화동과 송천동, 인후동, 혁신동, 만성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75번 △79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10번 △309번 △339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430번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 △752번 △820번 △970번 △999번 △3-2번 △6001번 △3001번 △3002번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 대책 상황실 운영(오전 6시~오전 12시) △출퇴근 시간 등 중요시간대 노조원 차량 운행 상황 파악 및 탄력 운행 △불편 예상 지역 예비차량 운행 및 마을버스 긴급 투입 △택시 증차 △교육청, 유관기관 등 중점 홍보 협조 등 파업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파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 누리집(www.jonju.go.kr)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www.jonjuis.go.kr), 전주시버스 어플 등을 통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시간 등 중요시간대 노조원 차량 운행 상황 파악 및 탄력 운행 △불편 예상 지역 예비차량 운행 및 마을버스 긴급 투입 △택시 증차 △교육청, 유관기관 등 중점 홍보 협조 등 파업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파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 누리집(www.jonju.go.kr)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www.jonjuis.go.kr), 전주시버스 어플 등을 통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그간 사측과의 사전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달 1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30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총 4.34% 인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조정 만료일인 지난 19일 열린 '제4차 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조정이 중지됨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임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민생중심 도정 운영 ‘박차’

‘다함께 민생추진단’ 2차 회의… 현장 애로 청취·반영계획 논의
민생정책조정회의·현장정책 간담회 등 통해 민생 챙기기 지속

전북자치도는 이후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특별대책을 가다듬어 왔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 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면서 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김제산단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업무 가중을 우려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퇴사)이 발생하고 있어 육아

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요구가 취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장소에서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폭 반영하여 민생 도정의 도민 체감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하고, 민생중심 도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현장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특별대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행정 결과 등을 토대로 4월초까지 특별대책 수립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5월 추경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2차 회의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매일수목 현장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민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민생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생정책조정회의,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함께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